

“민생경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역량 집중”

김태군 전남도의회 의장

김태군 전남도의회 의장은 29일 “12대 의회 의정 활동의 남은 1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전남매일과 제12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지역소멸과 인구문제 해결 등 지난 1년간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그동안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여수·광양만권의 경제위기 돌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12대 후반기 의장 취임 1년이 됐다.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은.
△지난 1년간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소멸과 인구문제 해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 전남은 22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이고, 16개 군은 인구감소지역이다. 고령화율은 2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급속한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인적자원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있던 내년 개교는 어려워졌지만, 지난 5월 26일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당위성을 피력,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도 ‘전남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의대 설립



복에 집중해 전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공공요금·대출 이자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지원,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전남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1회 추경에 국비 317억원이 확보돼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인데 최근 2차 추경안에 국비 428억원이 반영돼 앞으로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 유통 규모가 크게 늘어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확대와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강화하며,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수국가산단과 광양만권의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돌파 방안은.
△현재 여수국가산단과 철강산업 위기로 광양만권 전체가 경제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광양·순천 등 인근 지역 확대와 전기요금 감감 등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해답이 바로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이다. 이 산단은 미래 산업 핵심 소재 거점으로, 조성시 3조5,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4,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도의회는 광양만권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산단 지정에 중앙에 건의하고,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에 집중할 것이다. 기존의 노후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조속히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이러한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남도, 전남교육청과 함께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했다. 올해 초에는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힘써왔다.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12대 후반기 1년 도민 행복 최선 지역소멸·인구문제 극복 등 주력 광양만권 경쟁력 강화 적극 대응 재생에너지 등 새 정부 현안 지원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도 진력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전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다. 대응 방안은.
△새로운 정부, 진짜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다시금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은 ‘국립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기반으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 비록 12·3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로 당초 목표

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남의 중점 사업과 이슈는.
△새롭게 만들어질 기후에너지부와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및 ‘RE100 실현’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이미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설비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수석유화학산업의 에코산단 전환,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전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는 전남이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 등 국가적 목표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역소멸과 인구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은.
△지역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전국 면적의 11.9%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자본 등이 집중되면서 지역소멸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성 높은 인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에 폭넓은 권한과 재량이 부여돼야 하며,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를 제정했고, 올해 5월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도시 중심이며 재정 부담도 커서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방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의 청년이 차별없이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에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유는.
△전남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20세에서 39세 청년 5,944명이 순유출되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청년특구규정 조성 및 지원 조례’

-12대 도의회 후반기가 이제 1년 남았다. 앞으로 운영 방향은.
△제12대 전남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겠다.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지원,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국립의대 설립 지원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통해 효능감 높은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다. 남은 제12대 후반기에도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근산 기자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시급한데. 앞으로 계획은.
△12·3 비상계엄과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이에 도의회는 민생경제 회

최고의 품질로 교체 시공하는
광주활성탄이 함께 하겠습니다

활성탄·각종필터 전문회사
(주)광주활성탄

- 수질분야
- 대기분야
- 입상, 분말, 성형 활성탄 제조전문업체
- 각종 필터, 이온교환수지, 복합여과제 전문

T E L. 062) 361-9300. 9400
Mobile. 010-4660-7700
E-mail. kjcarbon@hanmail.net